

KMI 동향분석

VOL.216
2025 OCTOBER

발간년월 2025년 10월(통권 제216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감 수 윤성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우리 국민은 해양의 공익적 기능과 예산 확대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 - KMI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

김태한 해양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
(thkim@kmi.re.kr/051-797-4783)

백진화 수산정책연구실 전문연구원
(jhbaek@kmi.re.kr/051-797-4545)

전용한 해양경제연구실 전문연구원
(jyh@kmi.re.kr/051-797-4728)

김주현 해양경제연구실 실장
(jhkim@kmi.re.kr/051-797-4636)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5년 4월 1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체감도와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올해 해양수산 인식의 핵심 키워드는 “실생활”과 “체감”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해양수산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연상하는 이미지는 먹거리(수산물·해산물), 볼거리(바다·해양), 즐길거리(선박·해양레저) 등 일상과 밀접한 요소였다. 이는 국민 친화형 해양수산 콘텐츠 발굴과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어촌·연안지역의 인구소멸 위기(87.3%)와 국제정세 변화의 영향(84.4%)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거시적 변화가 해양수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정책 효과 체감도는 2021년 50.5점에서 2025년 54.0점으로 상승하여 국민이 해양수산 정책 성과를 점진적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양수산·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높은 가치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 확대에도 대체로 찬성하였다.

국민이 요구하는 주요 정책은 생활안정, 환경보전, 산업혁신, 안전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수산 관심분야를 살펴보면 20·30대는 상대적으로 해양문화·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기상재해, 과학기술, 극지 및 심해저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60대 이상은 수산업, 가격 안정, 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 세대별 맞춤형 정보제공과 정책 개발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내륙 지역 대비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역특화 해양산업 및 정책에 관한 홍보와 정책 발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분야별 인식을 살펴보면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 일반 인식’의 경우 우리 국민의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관심도는 53.7점(23년)→ 53.8점(24년)→ 54.7점(25년)으로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은 ‘해양수산’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바다/해양(13.1%), 항만(5.7%) 등 실생활 연관 요소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분야 관심 항목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가격(46.9%), 수산물 요리, 맛집(46.8%), 수산물 식품안전(38.1%)이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정보의 접촉 경로 비중은 인터넷(74.0%)> TV/라디오(64.2%)> SNS(38.7%) 순으로 ‘인터넷’은 ‘30대(80.5%)’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TV/라디오’는 ‘50대(73.0%)’와 ‘60대 이상(75.8%)’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SNS’는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이 많았으며, 직업 ‘학생(52.6%)’, 학력 ‘대학교 재학(55.7%)’에서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양 분야 인식’의 경우 국민의 해양환경 관심도는 74.5%로 상승하였으며, 바닷가 쓰레기가 4년 연속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양오염 단속처벌 강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혔고, 해양관광에서는 높은 이용요금이 최대 불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수산 분야 인식’의 경우 국민이 선호하는 수산물은 김, 고등어, 오징어 순이었으며, 화는 광어와 연어, 우럭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 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는 절반 이상이 동의했으나 원산지 표기 신뢰도는 여전히 낮았다. 은퇴 후 귀아귀촌 의향은 25.2%로 전년대비(31.3%) 6.1%p 감소했으며, 귀아귀촌 이유로 자연환경의 매력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우려스러운 점에서는 소득 불안과 지역사회 적응을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다.

‘해운·물류 분야 인식’의 경우 국민은 해운업을 국제 화물 운송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경제 기여도와 산업 파급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직업 안정성과 산업 정보 보유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안전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선박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국가경제 기여와 친환경·안전 선박기술 연구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항만 분야 인식’의 경우 국민은 항만을 주로 무역항으로 인식하였으며, 도시 인근 항만 개발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이유로는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부정적 이유로는 소음과 환경오염을 꼽았다. 발전 방향으로는 국제무역 중심항과 복합기능 항만이 제시되었고, 정책 연구 과제는 항만 자동화·지능화가 최우선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 방향은 생활 안정(수산물 가격·식품 안전성), 환경 보전(해양 쓰레기·기후변화 대응), 산업 혁신(스마트항만·친환경 해운기술), 안전 강화(해상안전·재난대응)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국민 인식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요약 표〉 해양수산 분야별 연계 국정과제

분야	근거	연계 국정과제
해양	해양 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안전 시급과제 36.1%, 기후변화 체감 69.1%	[국정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 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국정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양 환경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 56.2% 1위, 폐어망, 생활 쓰레기 등 바닷가 쓰레기 방지 심각도 평균 80점 이상, 단속·처벌 강화 42.8%	[국정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국정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수산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인정 82.9%, 예산 확대 찬성 81.1%, 저렴한 가격 유지 32.2%,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 29.1%, 귀어·귀촌 의향 25.2%	[국정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정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해운·물류	해운 연상=선박·무역·컨테이너·물류, 여객선 안전 요구 높음, 친환경 선박 기술 25.4%	[국정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국정 87]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선박·조선	산업 안정성 낮음, 안전성 부족 평가, 친환경·스마트 조선 기술 수요	[국정 35] 미래 신기술 성장과 글로벌 도약하는 중소기업 [국정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정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항만	긍정 이미지=물류 효율성·지역경제 기여, 부정 이미지=소음·환경오염, 스마트·친환경 항만 요구	[국정 20]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국정 38]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결국 이번 조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수산의 핵심 가치를 “생활 속 체감과 지속가능한 미래”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인식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생활 안정과 안전 강화, 중기적으로 환경 보전과 산업혁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강국 전략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와 국민 인식이 일치하는 ‘참여형 해양수산정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이번 조사는 국민의 해양수산 인식이 생활 밀착성과 체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 요인에 대해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 함께, 해양수산 및 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설문조사 개요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9년 연속 실시

■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수산 환경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현안에 관한 대국민 인식을 고려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환류가 필요

- 실효성 있는 증거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해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정부 현안의 인지도 및 정책 수요 파악이 필요함
- 이에 KMI는 해양수산 전 분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정책현안 인지도, 향후 정책 수요 파악 등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해양수산 분야 비전 설정 및 정책 방향에 활용하고자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를 9년(2017~2025년) 연속 실시하였음

■ KMI는 지난 9년간 해양수산의 가치와 분야별 인식, 현안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국민의 해양 활동 참여 정도, 필요 정책 등을 파악함

- KMI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거주 19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3,000명 대상으로 해양 일반인식, 분야별 해양수산 인식 등 조사하였음(신뢰도 95%에서 표본오차 $\pm 1.79\%$ 포인트)

〈표 1〉 조사 설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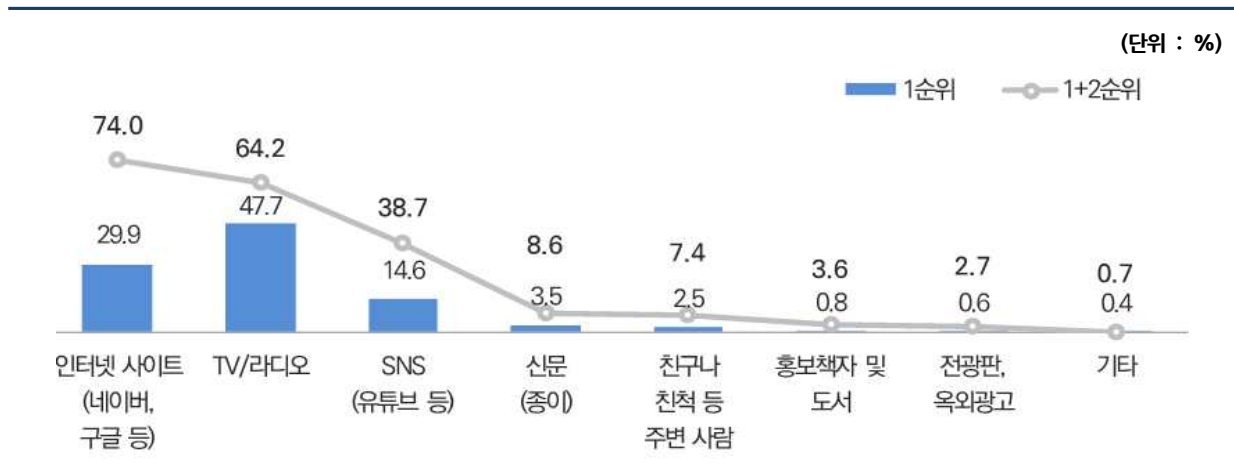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지역	전국(제주 포함)
표본크기	3,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1.79\%$ Point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CAWI: Computer Aided Web Interview)
표본추출 방법	성별, 연령, 지역 인구비례 할당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관 및 기간	(주)한국갤럽, 2025. 04. 01 ~ 2025. 04. 13

해양수산 정보는 인터넷과 TV를 통해 주로 접하며, 세대·지역별 관심 분야는 상이

■ (정보획득 경로) 해양수산 정보의 접촉 경로 비중은 인터넷(74.0%) > TV/라디오(64.2%) > SNS(38.7%) 순

- 정보 접촉 경험이 있는 국민은 74.4%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인터넷·TV/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인터넷’은 ‘30대(80.5%)’, ‘강원/제주(78.7%)’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TV/라디오’는 ‘50대(73.0%)’와 ‘60대 이상(75.8%)’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SNS’는 연령이 낮을수록 응답이 많았으며, 직업 ‘학생(52.6%)’, 학력 ‘대학교 재학(55.7%)’에서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 해양 수산 정보 획득 경로



■ (세대별/지역별 차이) 청년층 20·30대의 관심 분야는 해양문화·관광, 해양레저·스포츠, 60대 이상은 수산업, 식품 안전성으로 응답, 연안 지역의 해양·수산 관심도 전반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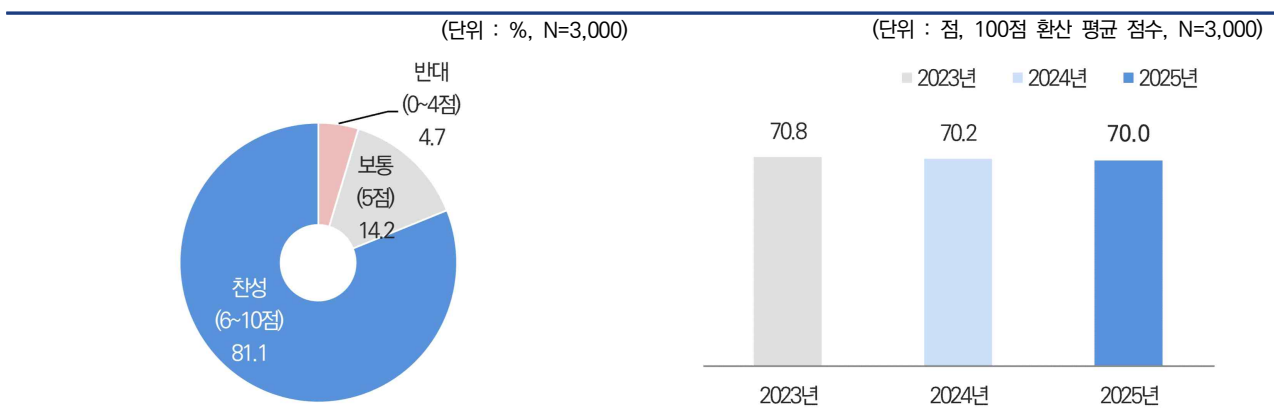
- 20·30대는 상대적으로 해양문화·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기상재해, 과학기술, 극지 및 심해저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이 세대를 겨냥한 문화·관광, 일자리, 산업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반면 60대 이상은 수산업, 가격 안정, 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 고령층 대상 복지와 귀어정책, 수산물 가격 등에 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함
- 연안 지역(부산·경남·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해양·수산 전반에 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특화 해양산업·관광·문화 클러스터 정책에 관한 홍보가 필요함

해양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추가 예산 의지는 80% 이상 찬성,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는 82.9%로 높게 평가

■ (예산 확대) 해양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 확대에 81.1%가 찬성

- 환경 및 안전보호, 영해기점 관리, 식량안보 등 해양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 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찬성한단' 의견이 81.1%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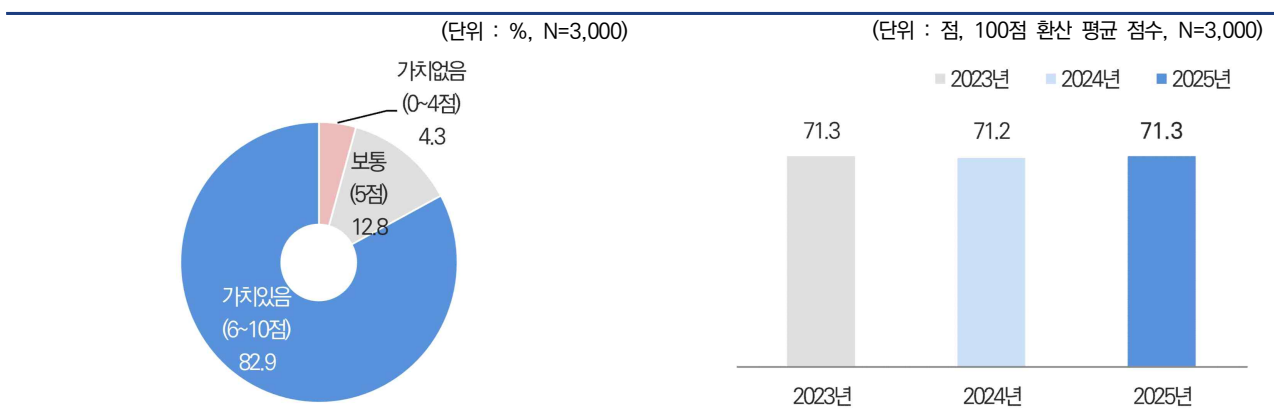
〈그림 3〉 해양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 추가 의지



■ (공익 기능)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82.9%가 '가치 있음'으로 평가

- 수산물 생산 이외에 바다환경과 연안지역 사회 유지, 전통 보존, 국민 휴식장소 제공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응답은 '가치 있음' 82.9%, '보통' 12.8%, '가치 없음' 4.3%로 나타남
- '가치 있음'이라는 응답은 50대~60대 이상(86.9%), 대졸 이상(8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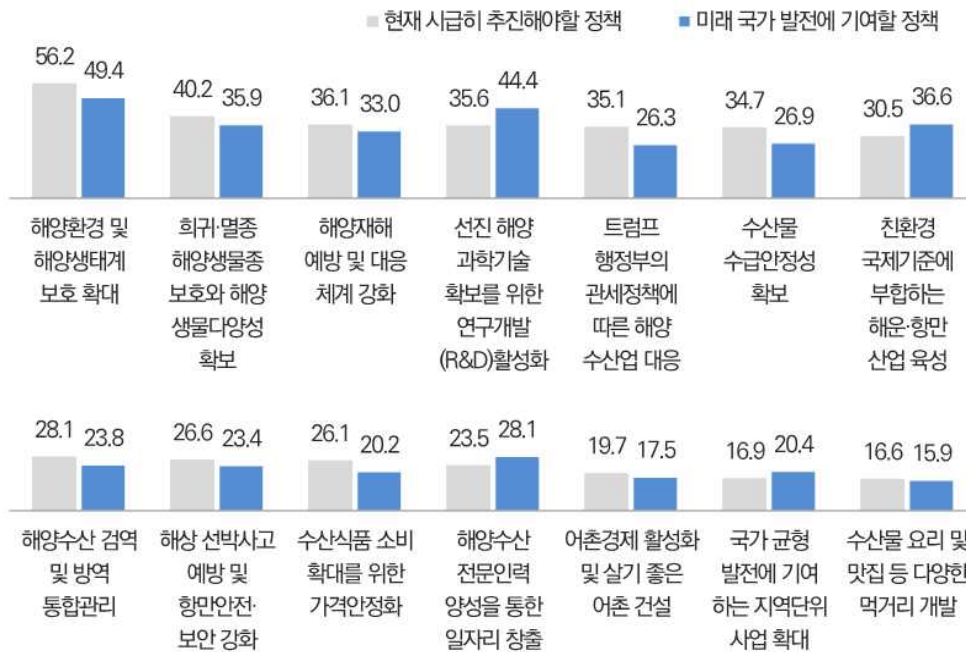
국민은 '생활 안정'과 '환경 지속성' 및 '선진기술 확보'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분야로 평가

■ (정책수요) 현재 시급히 추진할 정책으로 해양환경 보전, 해양안전 강화,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꼽힘

- 구체적으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56.2%), '희귀·멸종 해양생물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확보'(40.2%), '해양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36.1%), '선진 해양 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35.6%),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해양수산업 대응'(3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정책 또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49.4%)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선진 해양 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44.4%), '친환경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해운·항만산업 육성'(3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민은 수산물 가격 안정, 해양공간에서의 안전성 확보, 원산지 신뢰성 강화 등 생활 밀착형 과제와 해양쓰레기·플라스틱,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과제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함
- 생활 안정(가격·안전)과 미래 대응(환경·기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균형적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함

〈그림 5〉 현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및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정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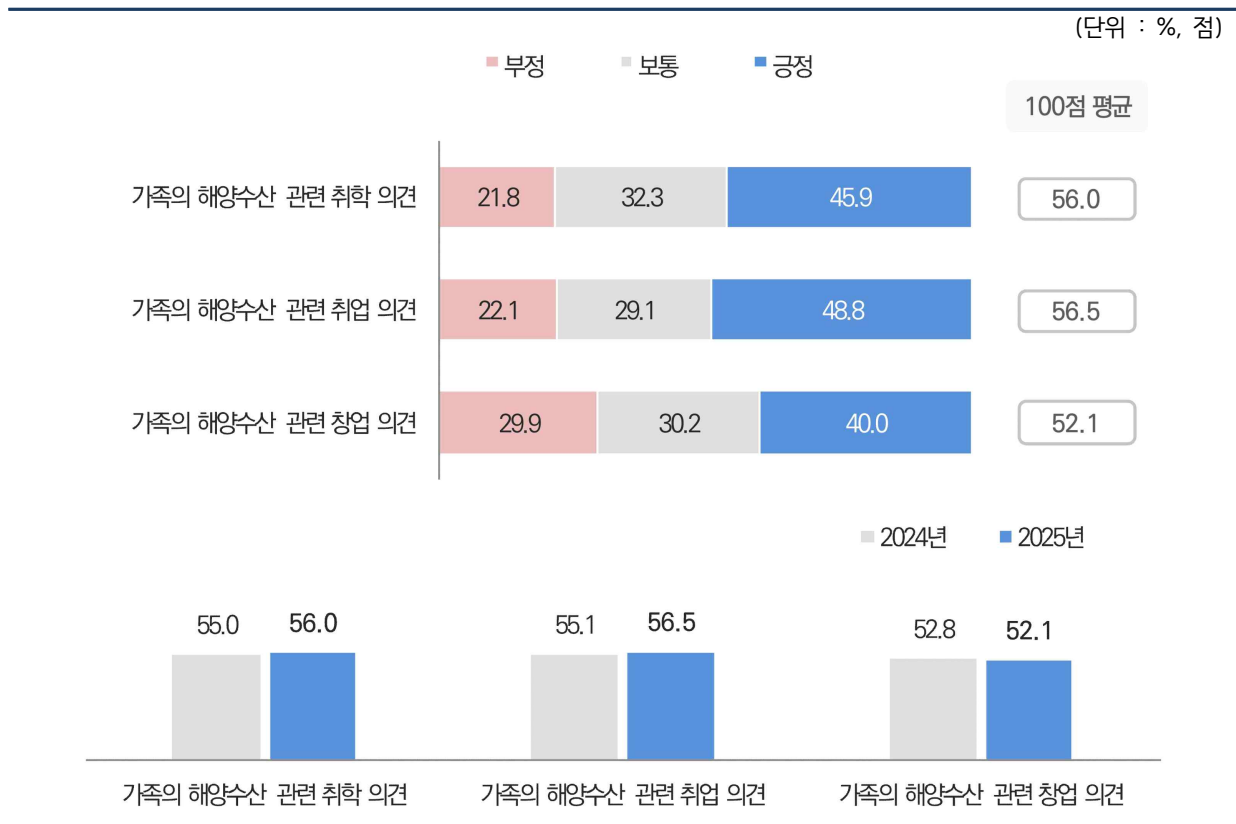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취업 지지는 전년대비 상승, ‘반대’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

■ (해양수산 진입)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5.9%, ‘취업’ 지지는 48.8%, 가족의 해양수산 취학/취업 반대 사유는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 해양수산 관련 ‘취학’과 ‘취업’에 대한 긍정 인식은 전년대비 각각 0.7%p, 1.7%p 상승하여 관련 인식이 소폭 개선됨
- 반면,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의 반대는 21.8%, 취업의 반대는 22.1%로 나타났으며, 취학 및 취업에 대한 인식은 2024년 대비 각각 1.0%p, 1.4%p 상승하여 큰 차이가 없음
- 해양수산 관련 취학/취업 반대 응답자(n=1,051명)를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이 48.3%(1+2순위 중복응답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일이 힘들어서’(44.2%), ‘격오지 근무를 해야 해서’(25.9%), ‘발전(성공) 가능성이 적어서’(21.1%), ‘경제적 수입이 적어서’(20.9%),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아서’(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취업 의견



대내외 환경 변화와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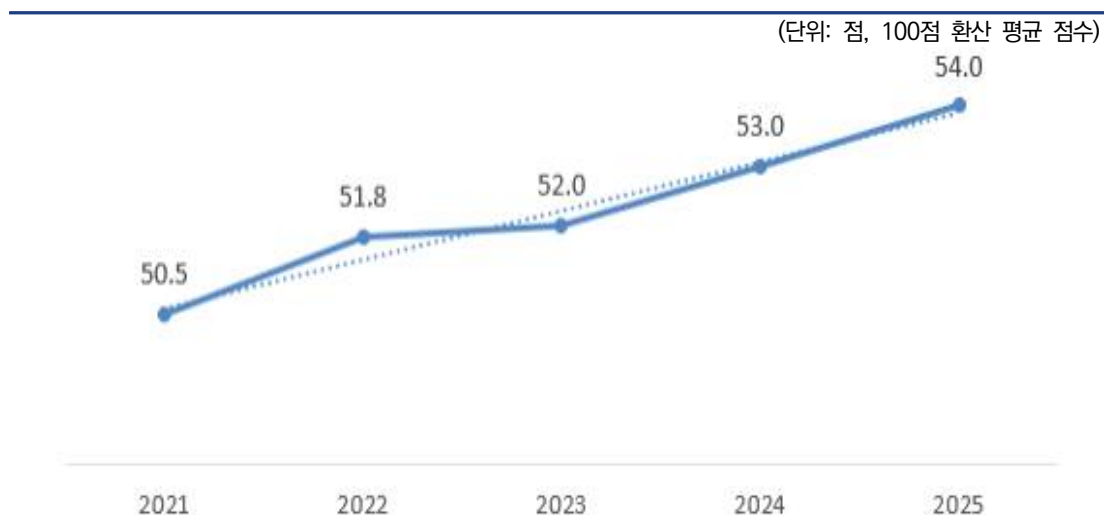
■ (환경 변화 체감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에 대한 의견으로 '어촌과 연안지역의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77.9점으로 가장 높음

- 그 뒤를 이어 '국제정세 변화는 해양수산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73.0점), '남·북극 빙하 면적 감소가 심해지면서 환경보호 인식이 증가하였다'(71.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 경제, 환경, 기술 부문별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의 영향에 관한 체감 정도는 2024년 67.0점에서 2025년 69.0점으로 2.0점 상승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 체감도) 지난 5년간 해양수산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는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

- 해양수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감 정도를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은 50.5점('21년)에서 54.0점('25년)으로 지난 5년간 체감 정도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한 전반적 평가에 관해서도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80.6점으로 가장 높고, 해양수산이 '국토와 바다를 지킨다'(79.9점)고 인식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76.4점)한다고 긍정함에 따라 우리 국민은 해양수산의 역할과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중요성과 역할 및 기능,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잘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그림 7〉 해양수산 정책의 효과 체감 정도



해양 분야

국민, 해양을 산업을 넘어 생태·안보·생활이 공존하는
국가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

■ (해양의 가치 인식) 국민은 해양을 산업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

- 해양의 중요성 평가에서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80.6점), ‘국토와 바다를 지킨다’(79.9점), ‘식량안보에 기여한다’(77.3점) 등 항목이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함
- 해양을 생태·안보·생활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인식하며, 해양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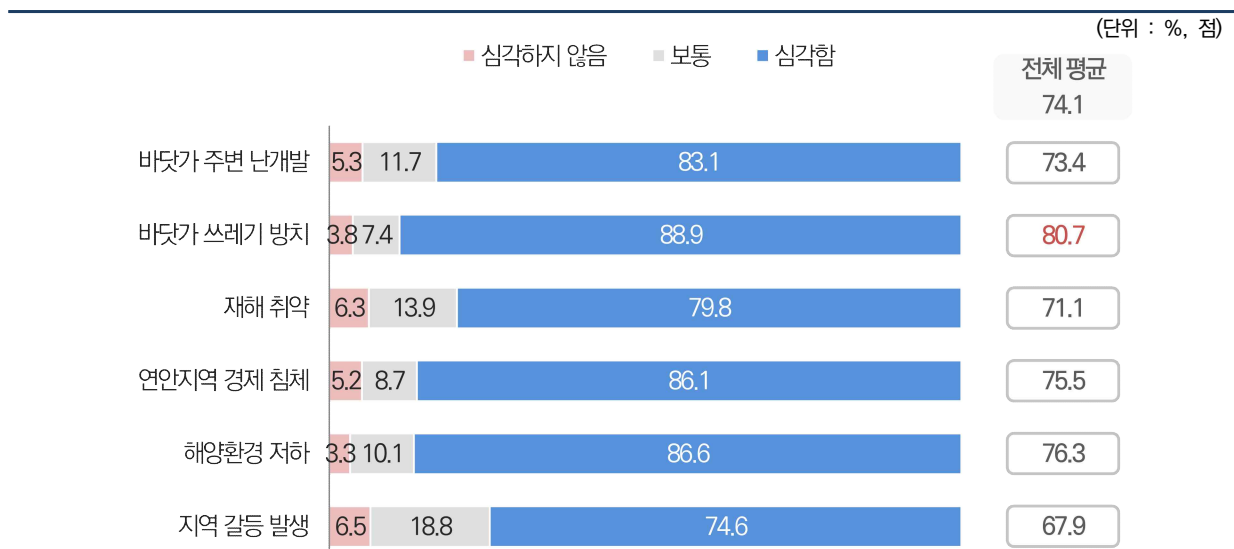
■ (해양환경 관심도 상승) 국민의 해양환경 관심도는 전년 대비 4.1%p 상승한 74.5%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임

- 관심도 평균점은 2023년 65.7점 → 2024년 65.9점 → 2025년 66.8점으로 완만히 상승함
- 이는 기후변화 및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된 결과로 해석됨

■ (해양환경 문제 인식) 폐어망·생활쓰레기 등 해양쓰레기 방치(80.7점)가 4년 연속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어 ‘자연해안 감소·수질 악화’(76.3점), ‘연안지역 경제 침체’(75.5점) 순임
- 대응 과제로는 ‘단속 처벌 강화’(42.8%), ‘국민 인식 제고’(33.2%) 등이 꼽혀,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 관리체계 필요성이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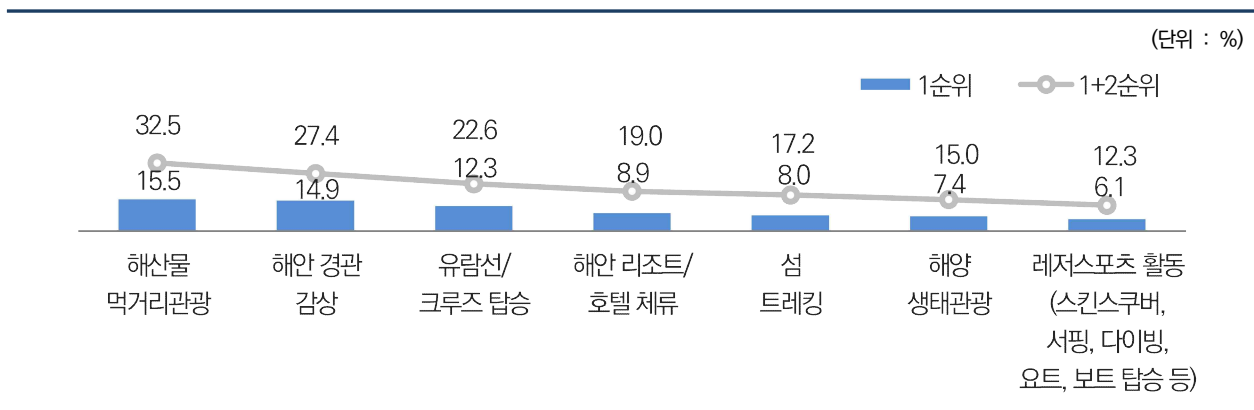
〈그림 8〉 해안가 문제점 항목별 심각도



■ (해양관광 수요 확대) 국민의 60% 이상이 연 1회 이상 바다 방문, 체류형 관광 확산

- 국민의 해안 방문 빈도는 '2~3회'(34.4%), '1회'(28.6%), 체류 기간은 '2박 3일'(36.9%), '1박'(32.3%)순으로 나타남
- 주요 활동은 '해산물 먹거리 관광'(32.5%), '경관 감상'(27.4%), '유람선·크루즈 관광'(22.6%) 순임
- 반면 불편 요인은 '이용요금 부담'(61.0%), '교통 접근성'(35.0%) 순으로, 관광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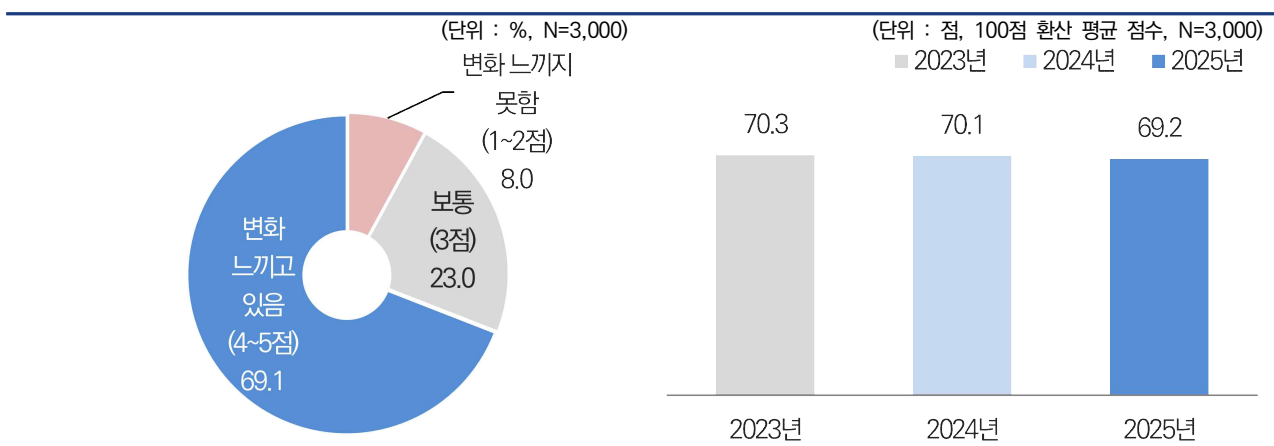
〈그림 9〉 해안가에서 희망하는 여가활동



■ (기후변화 영향 체감) 국민 10명 중 7명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를 직접 체감

- 주요 변화로 '해수면 상승',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 '태풍·해일 증가' 등이 지목됨
- 이에 따라 해양생태 복원, 재해 대응력 강화, 기후적응형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됨

〈그림 10〉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수산자원 평가



■ (해양수산 대내외 환경 변화) 해양기후·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영향 체감도 상승

- 2025년 국민의 해양수산 분야 인식조사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가 해양수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균 평가는 69.0점으로, 전년(67.0점) 대비 상승하였음
- 특히 ‘어촌·연안지역의 인구소멸 위기 심화’(77.9점)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됨
- 이와 함께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영향’(73.0점), ‘남·북극 빙하 감소로 환경보호 인식 확대’(71.3점) 등의 항목도 높은 점수를 보여, 국민은 해양수산을 경제·환경·안보가 긴밀히 연결된 국가 전략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국민은 해양을 산업의 일부가 아닌 생존 기반이자 국가 핵심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보전, 해양관광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해양영토 관리 등 다차원적 해양 가치에 주목하고 있음
- 이는 해양정책이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생태·안보·문화·기후 대응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만큼 ‘쓰레기·플라스틱 저감 → 생태계 복원 → 기후적응형 연안관리’로 이어지는 지속가능 해양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해양관광의 일상화와 체류형 전환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작용하나, 요금·교통·편의 인프라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해양정책은 국가경제, 환경보전, 국민생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해양국가’ 실현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해양영토 전략 고도화, 국민 참여형 해양 거버넌스 구축으로 나아가야 함

수산 분야

국민, 수산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

■ (수산물 소비 인식) 국민은 수산을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닌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

- 선호 수산물은 ‘김’(13.4%), ‘고등어’(12.2%), 생선회는 ‘꽁어’(41.5%), ‘우럭’(12.7%) 순으로, 전통적 소비 경향이 유지됨
- 주요 소비 장소는 ‘가정’(59.5%)으로, 가족 중심의 일상적 소비문화가 형성됨
- 수산물 인식은 ‘육고기보다 건강한 음식’(66.7점),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65.7점) 등 건강·안전성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함

〈그림 11〉 선호하는 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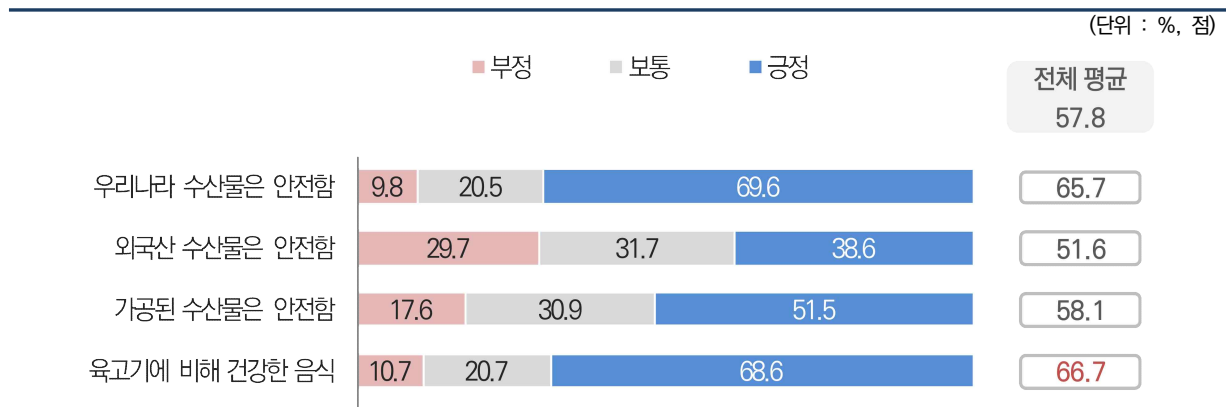
■ (유통 및 구매 행태) 수산물은 여전히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 구조가 주류

- 주요 구매처는 ‘대형마트’(64.3%), ‘전통시장’(18.9%), ‘온라인·홈쇼핑’(8.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의 대형마트 이용률(71.2%)이 높고, 60대 이상은 전통시장(25.6%) 이용이 두드러짐
- 이는 소비 편의성과 신선도 관리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대형 유통망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함

■ (수산물 안전성 인식)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부정 인식은 완화 추세

- 최근 3년간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부정 인식은 43.5%(23년) → 37.5%(24년) → 29.7%(25년)로 감소함
- 국산 수산물 품질은 ‘우수하다’(59.3%)는 응답이 높았으며, 원산지 표기 신뢰도는 ‘신뢰함’ 50.4%, ‘신뢰하지 않음’ 11.9%로 절반 수준임

〈그림 12〉 수산물 소비 인식 관련 의견



- 전반적으로 국민의 품질·안전성 신뢰는 강화되는 반면, 표시제·유통 투명성 강화 요구가 지속됨

■ (수산업의 사회적 역할) 국민은 수산업을 안전한 먹거리 공급자이자 환경보전 주체로 인식

- 수산업·어촌의 주요 역할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38.9%)과 ‘해양환경·수산자원 보전’(29.4%)을 중요하게 평가함
- 공익적 가치에 대해 ‘가치 있다’는 응답이 82.9%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산업을 사회적 가치 산업으로 인식함
- 이에 따라 수산업의 역할은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먹거리 안전·환경 보전·지역 공동체 유지를 아우르는 복합적 공익 기능으로 확장되고 있음

■ 시사점

- 수산은 국민에게 단순한 식량 공급을 넘어 국민의 건강·안전·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
- 국민은 전통적 소비 품목(감·광어 등)을 중심으로 가정 내 소비를 지속하면서, 국산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있음
- 한편, 수입산에 대한 부정 인식은 완화되는 추세로, 유통 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원산지 관리 강화가 신뢰 제고가 관건으로 부상함
- 국민은 수산업의 핵심 역할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자원 보전’을 꼽으며, 공익적 가치 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역할 확대를 기대함
- 향후 수산정책은 친환경 양식기술, 유통혁신, 원산지 관리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해양식량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해운 분야

국민, 해운산업을 '국가경제와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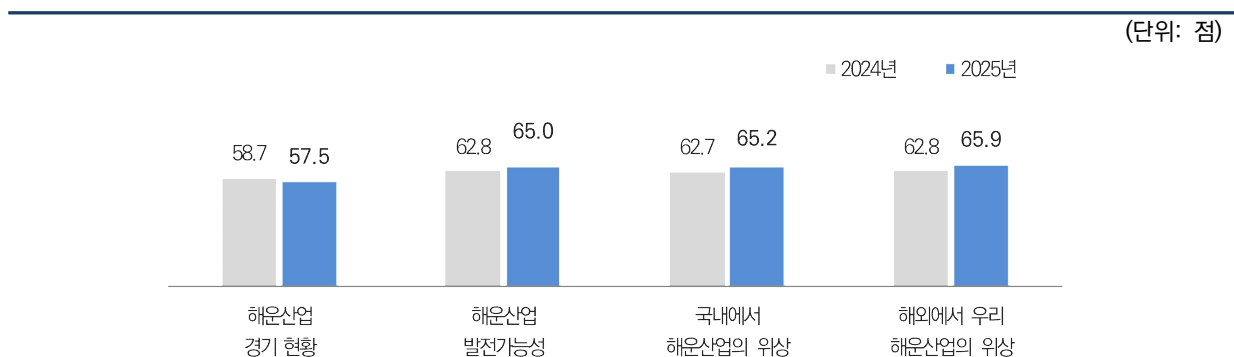
■ (해운업 이미지) 국민은 해운산업을 단순한 운송업이 아닌 국가경제와 무역을 지탱하는 전략 산업으로 인식

- 해운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국가 수출·입 화물 운송'(61.3%)으로,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함
- 특히 50대(65.5%)와 60대 이상(68.0%)에서 응답 비율이 높아, 기성세대일수록 해운의 산업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이어 '국내 항만 간 화물 운송'(21.0%), '국제 여객 운송'(14.0%) 순으로, 국민 다수가 해운을 물류 중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해운산업 위상 및 발전 가능성) 해운산업의 국내외 위상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상승세

- 해외 위상은 62.8점('24년) → 65.9점('25년), 국내 위상은 62.7점('24년) → 65.2점('25년), 발전 가능성은 62.8점('24년) → 65.0점('25년)으로 모두 상승함
- 이는 최근 글로벌 해운 시장의 운임 안정화, 물동량 회복, 선박 대형화 및 친환경 전환 투자 확대 등으로 국적선사의 수익성과 운항 경쟁력이 개선된 흐름이 국민 인식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그림 13〉 해운업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 (경제적 영향력 인식) 해운산업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

- ‘관련 산업 파급효과’ 71.9점, ‘국가경제 기여도’ 71.6점, ‘국가안보 기여’ 70.3점으로 산업 전반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
- 반면, ‘해운산업 정보 접근성’(50.2점), ‘직업 안정성’(52.3점)은 낮은 수준으로, 산업 내 인력 유입 확대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됨

국민, 해상안전 강화를 해운산업 발전의 핵심 과제로 인식

■ (해상안전 인식) 국민은 해상안전 확보를 해운산업 발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

- ‘노후 선박 수리·현대화’(31.3%)가 3년 연속 1위로 나타났으며, 이어 ‘불법 운항·조업 감시 강화’(29.5%), ‘화물·여객 안전기준 강화’(26.5%) 순으로 조사됨
- 특히 ‘불법 운항 감시 강화’ 항목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하여,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와 사고 예방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연안여객선 이용 및 안전 인식) 국민의 연안여객선 이용률은 낮지만,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은 높음

- 최근 1년간 연안여객선 ‘이용하지 않음’ 응답이 65.7%(전년대비 6.6%p 상승)로 과반을 차지하며, 전반적인 이용률은 감소 추세를 보임
- 이용 빈도는 ‘1회’ 15.1%, ‘2회’ 11.0%, ‘3회 이상’ 4.7% 수준으로 낮은 가운데, 안전성 인식은 ‘안전하다’ 37.4%(평균 56.0점)으로 나타나 체감 신뢰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임

■ 시사점

- 해운산업은 여전히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이자 공급망 안정의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민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전환을 주요 과제로 보고 있음
- 이는 해운정책이 단순한 운송 효율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경쟁력·공공 신뢰·환경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함
- 국민은 해상안전 확보를 해운산업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노후 선박 현대화’와 ‘불법 운항 단속 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동시에 IMO(국제해사기구)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안전 선박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향후 해운정책은 디지털 해운체계 고도화, 친환경 연료 전환, 국제규제 대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해운산업 생태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항만 분야

국민, 항만을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 무역·복합 기능·환경 조화를 중시하는 항만 발전 요구 확산

■ (항만 이미지 인식) 국민은 항만을 국가 무역과 물류의 중심 거점으로 인식

- 항만 상기 이미지 조사에서 '무역항'(43.7%)이 3년 연속 1위로, 항만이 여전히 국가 교역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응답 비율이 높아, 항만 이용 및 산업 인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식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도시 인근 항만 조성 인식) 국민 절반 이상이 도시 인근 항만 조성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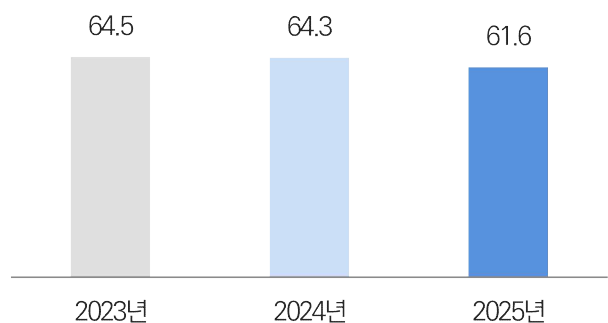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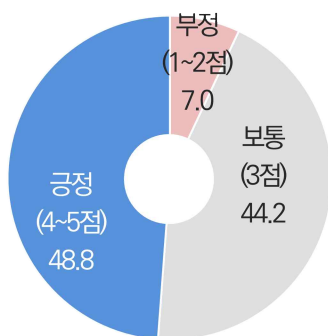
- 조사 결과 '긍정' 48.8%, '보통' 44.2%, '부정' 7.0%로 긍정 의견이 우세하며, 남성(53.0%), 부산·경남·울산(57.5%), 농·임·어업 종사자(61.4%)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긍정 이유로는 '지역 발전 기여'(65.0%), '일자리 창출'(45.5%), '지역·국제 교류 촉진'(40.2%)이 꼽혔으며, 부정 이유는 '소음 발생'(40.1%), '환경오염'(35.5%), '항만 사고 우려'(26.8%)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 도시 인근에 항만 조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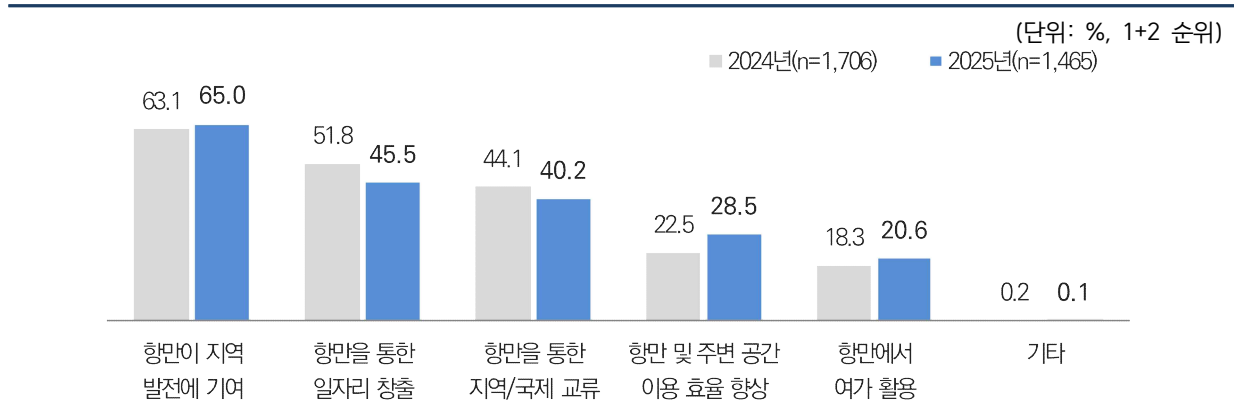
(단위 : %, N=3,000)

(단위 : 점, 100점 환산 평균 점수, N=3,000)

■ 2023년 ■ 2024년 ■ 2025년



〈그림 15〉 도시 인근 항만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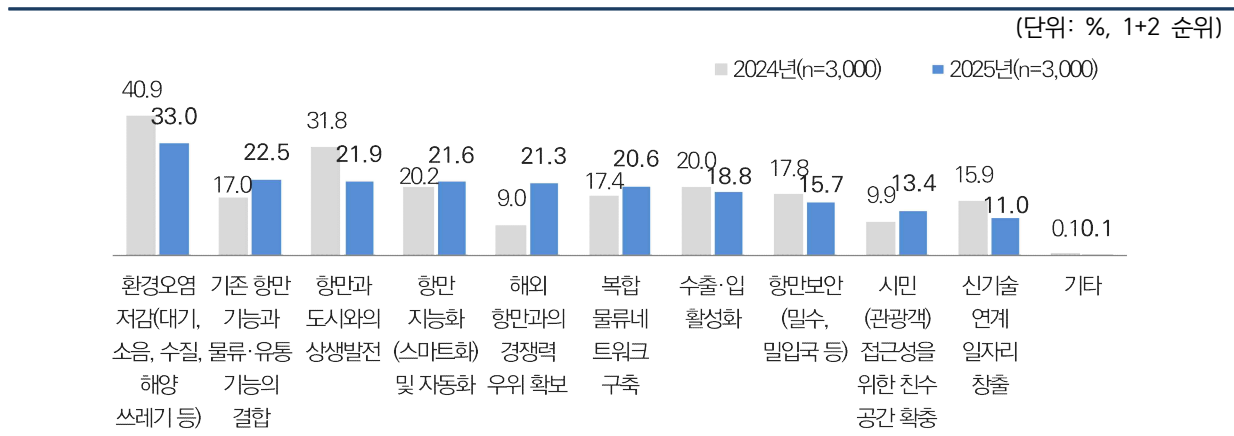
■ (향후 발전 방향) 국민은 항만의 미래를 ‘국제무역 중심향’과 ‘복합기능 중심향’으로 전망

- 향후 발전 방향으로 ‘국제무역 중심향’(36.9%), ‘복합기능 중심향’(27.4%)이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학생(43.2%)과 연안 거주 경험자(41.1%)는 국제무역 중심향을, 주부(35.5%)는 복합기능 중심향을 선호함
- 국민은 항만이 단순 물류 기능을 넘어 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인식(68.3점)하였으며, ‘현재 항만이 복합물류 중심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항목은 61.9점으로 평가됨

■ (환경과 상생 인식) 항만의 환경오염 저감과 도시 상생 발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

- 항만 정책 중점 분야로 ‘환경오염 저감’(33.0%)이 1위, 이어 ‘물류·유통 기능 결합’(22.5%), ‘항만·도시 상생 발전’(21.9%) 순임
- 이는 국민이 항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도시 연계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발전 모델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16〉 항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분야



■ 시사점

- 항만은 전통적인 무역 중심 인프라에서 벗어나 관광·문화·도시재생이 결합된 복합·친환경 해양거점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국민은 항만을 국가 교역의 기반으로 인식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기대하고 있음
- ‘도시와 항만의 공존’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량(48.8%)이 도시 인근 항만 조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임
- 향후 항만정책은 경제성·환경성·공공성의 조화를 지향해야 하며, 특히 국민이 꼽은 핵심 과제인 자동화·지능화(31.2%)와 친환경 항만 구축(16.4%)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스마트 항만, 에너지 절감형 운영체계, 친환경 장비 확산 등 기술혁신 기반의 지속가능 항만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종합 분석 및 시사점

올해의 해양수산 키워드는 ‘실생활’과 ‘체감’

■ (해양수산 이미지) 우리 국민에게 해양수산과 관련해 연상되는 이미지는 ‘실생활’ 중심의 키워드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민 친화형 해양수산 콘텐츠 발굴이 중요

- 해양수산 연상 이미지와 관련해 우리 국민은 먹거리(수산물/해산물), 볼거리(바다/해양), 즐길거리(선박, 해양레저 및 스포츠) 등 실생활에 근접한 이미지를 첫 번째 이미지로 연상한다고 응답함
-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 또한 ‘수산물 가격’, ‘수산물 요리, 맛집’, ‘수산물 식품 안전’, ‘해양 쓰레기 및 플라스틱’, ‘해양 생태계 및 해양환경’, ‘해양 문화관광’ 등으로 조사됨
- 항만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상업적인 용도 외에 관광, 문화 역할을 겸하는 복합 기능으로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68.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 인근의 항만을 조성하는 것에 관해서도 ‘항만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남
- 첫 번째 연상 이미지와 관심 분야, 그리고 항만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은 비교적 실생활에 밀접하고 친숙한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수산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국민에게 친숙한 실생활 중심의 해양수산 콘텐츠 발굴과 제공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정책 우선순위)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은 생활안정, 환경보전, 산업혁신, 안전강화로 파악되며 세대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 필요

- 현재 사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과 미래 국가발전에 기여할 정책을 분석한 결과, 크게 생활안정(수산물 가격 안정, 안전성 강화), 환경보전(해양쓰레기·플라스틱 문제 해결, 기후변화 대응), 산업 혁신(스마트항만, 친환경 해운기술, 해양신재생에너지), 안전강화(해상·해운 안전 확보,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가 높은 정책 우선순위로 나타남
- 해양수산 관심분야를 살펴보면 20·30대는 상대적으로 해양문화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기상재해, 과학기술, 극지 및 심해저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60대 이상은 수산업, 가격 안정, 식품 안전성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 세대별 맞춤형 정보제공과 정책 개발이 요구됨
- 연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내륙 지역 대비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역특화 해양산업 및 정책에 관한 홍보와 정책 발굴 또한 필요함

■ (취학과 취업)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과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높아진 만큼 향후 해양수산 분야로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

- 가족의 해양수산 관련 ‘취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5.9%, ‘취업’의 지지는 48.8%로 약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가족의 해양수산 분야로의 진입을 지지한다고 밝힘
- 해양수산 관련 ‘취학’과 ‘취업’에 대한 긍정 인식은 전년대비 각각 1.0%p, 1.4%p 상승하여 관련 인식이 개선되었음
- 그럼에도 해양수산 관련 취학/취업 반대 사유에 대해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일이 힘들어서’, ‘격오지 근무를 해야 해서’, ‘발전(성공) 가능성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많아 해양수산 분야로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년층 대상 진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 (대외여건 체감도) 국민은 인구감소·기후변화·국제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이 해양수산에 미치는 영향을 뚜렷하게 체감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의 변화와 영향을 평가한 결과, ‘어촌과 연안지역의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87.3%가 응답하였으며, ‘국제정세 변화가 해양수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응답도 84.4%로 나타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의 영향에 대해 국민의 체감도가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변화의 평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음’이라는 응답이 69.1%로 나타나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영향을 체감하고 있음
-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영향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선제적으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 체감도) 해양수산 정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점진적으로 상승

- 해양수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체감 정도를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은 50.5점(‘21년)에서 54.0점(‘25년)으로 지난 5년간 체감 정도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함께 해양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국가 예산 추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과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해서 ‘가치 있음’이라는 응답이 모두 10명 중 8명 이상으로 나타나 해양과 수산 및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성과 창출과 해양수산의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국정과제 연계 방향)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를 통한 정책 추진 방향 제시

■ (해양) 해양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는 국민이 꼽은 시급 정책 과제 중 36.1%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안 방문자들은 안전시설 부족과 사고 위험을 주요 불편 요인으로 지적

- 국민의 69.1%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변화를 체감한다고 응답하여, 해양환경 악화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인식은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 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됨
- 향후 정책은 단기적으로 해양사고 예방 인프라 및 안전망 확충, 중기적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해양영토 관리체계 강화, 장기적으로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종합 전략 추진이 필요함

■ (해양 환경) 해양환경 보전은 국민이 꼽은 시급 정책 과제 중 1위(56.2%)로,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도는 평균 80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응답자의 42.8%는 ‘단속·처벌 강화’를 최우선 대응으로 꼽았으며, 인식 제고(33.2%)와 기술 투자(27.3%)도 주요 과제로 제시됨
- 이는 [국정40]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국정43]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됨
- 단기적으로 해양쓰레기 감축과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친환경 선박 보급과 항만 인프라 개선, 장기적으로는 해양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형 해양산업 정착을 추진해야 함

■ (수산)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의 82.9%가 ‘가치 있음’, 81.1%가 예산 확대에 찬성하는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음

- 수산물 소비에서는 가격 안정(1순위)과 안전성 확보(2순위)가 핵심 요구로 나타났으며, 귀어·귀촌 의향은 25.2%로 감소세를 보여 정착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이러한 결과는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정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과제와 연계됨
- 정책은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과 원산지 신뢰 제고, 중기적으로 어촌 공익직불제 확대와 귀어·귀촌 정착 지원, 장기적으로 수산식품의 전략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식량안보 기여를 지향해야 함

■ (해운·물류) 국민은 해운산업을 ‘국제 화물운송 산업’으로 인식하며,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71.6점)와 파급효과(71.9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여객선 이용률은 낮은 반면, ‘노후 선박 현대화’(31.3%), ‘불법 운항 감시 강화’(29.5%) 등 안전 확보 요구가 높게 나타남
- 이는 [국정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국정87]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과제와 연계됨
- 정책은 단기적으로 여객선 안전망 강화 및 노후 선박 교체, 중기적으로 권역별 물류 거점 구축, 장기적으로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 확충과 근로자 복지 제도화를 추진해야 함

■ (선박 조선) 선박 및 조선 산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지만, 산업 안정성·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낮고, 친환경·스마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 국민은 AI·디지털 기반 조선 기술 혁신과 조선소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동시에 요구함
- 이는 [국정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국정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정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 전환 과제와 밀접히 연계됨
- 단기적으로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자 보호, 중기적으로 스마트 조선 기술 도입 및 중소 조선사 지원, 장기적으로 친환경·스마트 조선 경쟁력 강화 및 인력 구조 재편이 필요함

■ (항만) 국민은 항만을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인식하며, 긍정적으로는 물류 효율성과 지역경제 기여, 부정적으로는 소음·환경오염 문제를 지적

- 항만의 미래상으로는 ‘국제무역 중심항’(36.9%)과 ‘복합기능 중심항’(27.4%)을 선호하며, 스마트·친환경 항만 전환 수요가 높음
- 이는 [국정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정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과제와 연계됨
- 단기적으로 노후 항만 재개발 및 보안 강화, 중기적으로 스마트항만 시범사업과 친환경 인프라 확충, 장기적으로 복합물류·에너지 허브형 항만 구축을 추진해야 함

〈표 2〉 해양수산 분야별 정책연계 매트릭스(조사지표-국정과제-로드맵)

분야	근거	연계 국정과제	정책 로드맵
해양	해양 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안전 시급과제 36.1%, 기후변화 체감 69.1%	[국정 74] 국민안전을 위한 법 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국정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단기: 해양사고 예방 인프라·안전망 확충 중기: 기후변화 대응형 해양영토 관리 강화 장기: 해양강국 전략 추진
해양 환경	해양생태계 보호 확대 56.2% 1위, 폐어망, 생활 쓰레기 등 바닷가 쓰레기 방치 심각도 평균 80점 이상, 단속·처벌 강화 42.8%	[국정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국정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단기: 해양쓰레기 감축, 불법투기 단속 중기: 친환경 선박 보급, 항만 친환경 인프라 확충 장기: 해양생태계 복원, 탄소중립 해양산업 정착
수산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인정 82.9%, 예산 확대 찬성 81.1%, 저렴한 가격 유지 32.2%, 수산물 취급·관리 안전도 향상 29.1%, 귀어·귀촌 의향 25.2%	[국정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정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단기: 수산물 가격 안정, 원산지 신뢰 제고 중기: 어촌 공익직불제 확대, 귀어·귀촌 정착 지원 장기: 수산식품 전략산업화, 글로벌 식량안보 기여
해운·물류	해운 연상=선박·무역· 컨테이너·물류, 여객선 안전 요구 높음, 친환경 선박 기술 25.4%	[국정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국정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국정 87]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단기: 여객선 안전망 강화, 노후선박 교체 중기: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 지역 물류 거버넌스 장기: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 강화, 근로자 복지 제도화
선박 조선	산업 안정성 낮음, 안전성 부족 평가, 친환경·스마트 조선 기술 수요	[국정 35] 미래 신기술 성장과 글로벌 도약하는 중소기업 [국정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국정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단기: 선박 조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동자 보호 중기: 스마트 조선·AI 기술 도입, 중소기업 지원 장기: 친환경·스마트 조선 경쟁력 확보, 인력 구조 재편
항만	긍정 이미지=물류 효율성·지역경제 기여, 부정 이미지=소음·환경오염, 스마트·친환경 항만 요구	[국정 20]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 [국정 38]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단기: 노후 항만 재개발, 안전·보안 강화 중기: 스마트항만 시범사업, 친환경 설비 확충 장기: 복합물류·에너지 허브 발전, 글로벌 친환경 항만 모델 구축

주: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참고

자료: 저자 작성